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 말씀

2019.1.25.(금) 14:30~15: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업권 협회장님과 은행장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9.13 주택대출 규제, DSR 도입 등

가계부채를 심층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최근 국내외 가계부채 관련 분석 보도를 보면,

가계부채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어느 한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18.3분기말 기준 6.7%로

장기추세치(8.2%)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18년말 기준 증가율도 6.7%에 근접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7년 8%대로 꺾이고, '18년에는 더 낮아져서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5)10.9 ('16)11.6 ('17)8.1 ('18.3Q)6.7

그리고 이 추세에 따르면,

'21년에는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19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여타 시장,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장여건 변화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무엇보다도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 가계 유동성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IS 등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와 경제성장에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한국, '17년) 97.5% (OECD평균, '16년) 67.3%

*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비성향(%) : ('08년) 75.9 ('12년) 74.1 ('16년) 71.1

따라서 현 수준에서 높은 가계부채 비중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라는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정금리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금리상승이 채무 상환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비중 : ('13말) 15.9% → ('18.9말) 44.3%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대출이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③ 가계부채를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조원) : ('15말)41.4 ('16말)52.0 ('17말)66.6 ('18말)92.3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감독기관, 금융회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말→'18.9말 잔액기준) :

(부동산업·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소매업) 16→14%

Ⅲ. '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

2019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지속

과중한 가계부채 규모, 빠른 증가속도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습니다.

업권별·회사별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자금중개가 더 이상 가계대출 위주가 아니라
기업 등 생산적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인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금년 중에 도입하겠습니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출 규제개선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②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그동안 정부는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新DTI, 은행권 DSR, 9.13 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근차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시장은 여러 수급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규제 목적이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대출취급 관행을 확립하는데 있는 만큼,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 규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9년에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가계대출 취급 관행이
현장에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10월 은행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가
차츰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 ('18.6월) 72% → ('18.11~12월) 47%
- *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19.2% → ('18.11~12월)8.2%

앞으로도 은행권 DSR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비율이 적절한지 등을 계속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으로 도입·시행하겠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시계를 넓히면,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 중심의 대출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출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기업대출 확대, 혁신적인 자금중개 채널 개발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여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Stress-DTI 등 금리상승까지 감안한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겠습니다.

* Stress-DTI : ‘실제금리+스트레스 금리(최소 1%p)’ 기준으로 산출한 DTI를 80% 이내 관리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금년 1분기중 출시하겠습니다.

*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아울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2일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과 합동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기대가 큼니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등 개선방안은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향상되고,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기존 COFIX보다 27bp 가량 낮은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는데

금융연구원이 COFIX 연동 신규대출 규모,
대출전환 예상율 등을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해 주시고,
새로 나올 COFIX도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역시 새로운 COFIX가 시범실시되면
그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로운 COFIX 연동 상품을 적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금년에는 그동안 대출규모가 급증해 온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부 업종별, 대출 목적별 구체적인 취급 내역을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아
어디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업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18년에 도입한 LTI, RTI 등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종으로의 대출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여
과중한 대출 증가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원인, 취약 요소 등을
세세히 파악하고 업종별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사마병법)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채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닌 만큼,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만큼
각 금융회사는 체력을 키우고 영업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4월,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전례없는 글로벌 부채가 큰 충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주어진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닫히기 전에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